

## 부산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분석

김혜진\*

### | 목 차 |

- I. 머리말
- II.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현황과 훈격
- III. 부산지역 독립유공자 현황
- IV. 부산지역 독립유공자 포상년도별 현황 분석
- V. 결론

### | 국문초록 |

현재 대한민국 「상훈법」에 의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상훈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건국훈장 대통령장, 건국훈장 독립장, 건국훈장 애국장, 건국훈장 애족장의 5등급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2016년 9월 현재까지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30명을 포함하여 총 14,562명이며 아래 등급으로 갈수록 포상 숫자가 증가한다. 이러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1949년 「건국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부터이며 1963년 기존의 훈장령 등을 통합한 「상훈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기별로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1950년 설립된 ‘군사원호청’이 87년 ‘국가보훈처’로 개칭되어 독립유공자への 공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사학전공 / [ekfejddl@ks.ac.kr](mailto:ekfejddl@ks.ac.kr)

훈과 포상에 대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기념관이 건립되고 독립운동사연구소가 생기면서 독립과 보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는 크게 3.1운동, 국내항일, 임정활동, 의병활동 등의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거국적인 독립만세 시위였던 3.1운동 관련 유공자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일본의 식민지배 거점이었던 경상도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로 공훈되었다. 또한 출신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개인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산출신의 독립운동가 115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바탕으로 운동계열별, 포상시기별 분석을 하였다. 전국의 독립유공자 공훈 현황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3.1운동 관련으로 서훈된 독립유공자의 수가 많았으며 시기적으로 90년대에 발굴, 포상된 경우가 많았다.

부산지역의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독립유공자에 대한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핵심주제어: 독립유공자, 공훈록, 분석, 부산, 건국훈장

## I. 머리말

지난 2015년 의열단원들의 친일과 암살작전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에 이어 올 2016년에도 의열단의 독립운동과 친일과 항일 사이의 고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밀정’이 상영되었다. 두 영화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제의 악랄했던 식민지배를 보여주고 우리민족의 독립애와 자긍심을 일깨워줌으로서 흥행을 이루었다. 또한 영화는 김구, 김원봉, 남자현, 황옥, 김상옥, 김시현 등의 실존인물들을 영화에 배

치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었다.

대한민국은 격동의 근대를 겪으면서 불가피하게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이에 항거하여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역할에서 민족해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는 현재까지도 그 공로가 회자되어 다양한 공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는 점점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전자공훈사료관을 통해 이름만 검색하면 해당 유공자의 공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도 인물찾기를 통해 이름, 출생지, 운동계열, 훈격, 내용을 검색하여 해당 독립유공자의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상훈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 서훈을 하고 있다. 훈장은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등 총 12가지로 공로를 분류하여 수여하고 있다. 그중 건국훈장은 식민지배에서 민족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훈수여이며 현재 14,562명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대통령장, 국민장, 애국장, 애족장) 및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sup>1)</sup> 순국열사, 애국지사에게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sup>2)</sup>

1) 상훈법 제 11조(건국훈장)에는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공적 내용에 따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였다.

2)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적용대상자)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

에 따라 선양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다.

독립유공자의 포상은 1949년 이승만대통령, 이시영부통령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14,562명이 공훈되었으며 그 동안 발굴되지 못한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포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1949년 단 2명이 건국훈장에 포상되었으며 1950년에는 헐버트 만이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되었다. 50년대에는 한국전쟁 상황을 고려해도 중국의 주석 장개석이 공훈 받은 것이 전부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제 3공화국에 와서는 18년간의 집권을 감안해 718명이라는 수의 독립유공자들이 포상되었다. 이후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의 제 5공화국에서는 67명의 독립유공자만이 포상을 받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급증하였으나 그 등급이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sup>3)</sup> 2000년대부터는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그 동안 발굴되지 못한 다양한 해외 활동 독립유공자들을 비롯해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포상이 늘어나고 있다. 독립유공자의 포상은 시기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실제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검색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시기별 분류와 특징에 대한 부가 설명은 전무하다. 또한 부산이 제2의 도시이며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의 최전선이었던 지역적 특성에 비해 출생지역별 검색에서 부산, 동래를 따로 검색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독립유공자공훈록은 그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나열에 불과할 뿐 그들의 특징과 성격, 시기별 포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데에서 본 연구가 출발되었다.

---

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3) 윤선자, 2010, 「광복 후 애국선열 선양정책 재조명」 『사학연구』 100, 한국사학회, 370~3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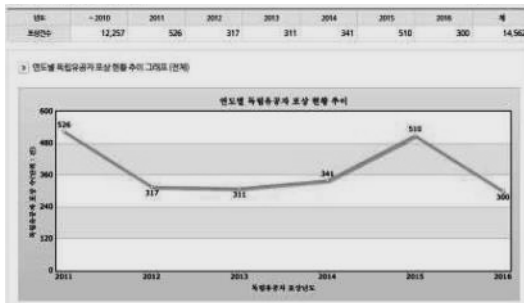
국가유공자 포상에 대한 분석은 출신지역별, 운동계열별, 국권침탈의 시기별, 포상진행 **년도별**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복잡 다양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에 대해서 최근독립유공자 포상현황과 출신지역, 훈격, 운동계열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부산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현재까지 포상된 115명의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현황과 포상년도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현황과 훈격

### 1.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현황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령 제 82호에 의하여 1949년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상훈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림 1> 년도 별 포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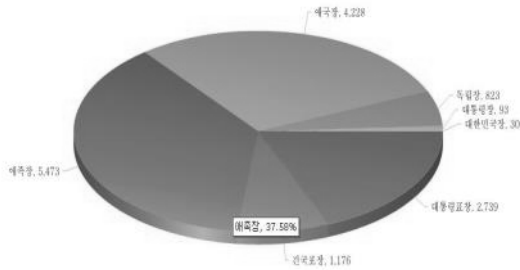


<공훈전자자료관 홈페이지 발췌>

독립유공자 건국훈장은 1949년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스스로에게 수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까지 14,562명의 독립유공자들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에 수여되었다.

1949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보훈처에서 포상한 독립유공자는 총 12,257명이며 2011년에는 526명, 2012년에는 317명, 2014년에는 341명, 2015년에는 510명, 2016년 9월 현재까지는 300명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를 통해 꾸준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조사를 시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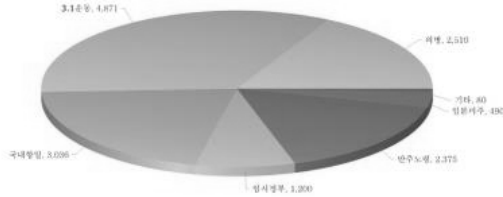
<그림 2> 등급별 포상현황



<공훈전자자료관 홈페이지 발췌>

건국훈장 등급별로는 1등급인 대한민국장이 총 30명으로 0.21%를 차지하며 2등급인 대통령장이 93명으로 0.64%이다. 그 아래인 독립장은 823명으로 5.65%이며 4등급인 애국장은 4,228명으로 29.03%이다. 5등급 애족장은 5,473명으로 건국훈장 포상 중 가장 많은 37.58%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표창과 건국포장은 각각 2,739명(18.81%), 1,176명(8.08%)이 포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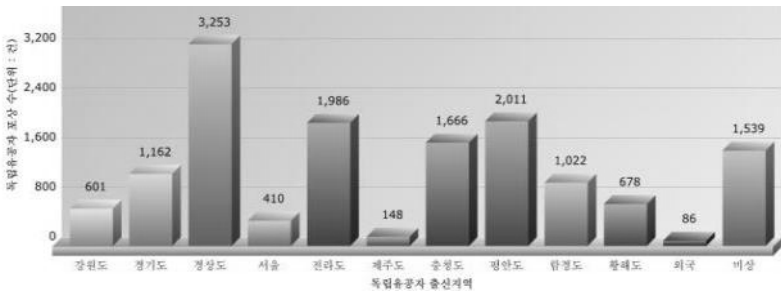
<그림 3> 운동계열별 포상현황



<공훈전자자료관 홈페이지 발췌>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운동계열을 의병활동, 3.1운동계열, 국내항일활동, 임시정부활동, 만주노령 방면에서의 활동, 일본미주지역에서의 활동, 기타로 총 7가지로 분류해 놓았다. 3.1운동계열이 가장 많은 33.45%(4,871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국내항일활동이 20.85%(3,036명), 의병활동이 17.24%(2,510명), 만주노령에서의 활동이 16.31%(2,375명), 임시정부 활동이 8.24%(1,200명), 일본미주에서의 활동이 3.36%(490명), 기타가 0.55%(80명)이다.

<그림 4> 출신지역별 포상현황



<공훈전자자료관 홈페이지 발췌>

독립유공자 출신지역별로는 경상도가 3,253명으로 가장 많은 22.34

%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평안도와 전라도, 충청도가 각각 13.81%(2,011명), 13.64%(1,986명), 11.44%(1,666명)로 비교적 많은 수의 독립유공자가 포상을 받았다. 경기도와 함경도가 7.98%(1,162명), 7.02%(1,022명)이며 그 다음으로 황해도 4.66%(678명), 강원도 4.13%(601명) 서울이 2.82%(410명) 제주도 1.02%(148명) 외국이 0.59%(86명)이다. 이외에도 출신지역이 불분명한 독립유공자의 수가 10.57%(1,539명)에 달하여 앞으로 독립유공자 조사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 2. 국가보훈처 지정 독립유공자 훈격

### 1)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상훈의 내용과 기준

1949년에 제정, 공포, 시행된 건국훈장은 1963년 각종 훈·포장령(勳褒章令)을 통폐합한 「상훈법」으로 1967년 2월에는 대통령령 제 2929호로 「상훈법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이때 건국공로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개정되어 건국공로훈장중장(建國功勞勳章重章)을 건국훈장대한민국장(建國勳章大韓民國章)으로 건국공로훈장복장(建國功勞勳章復章)을 건국훈장대통령장(建國勳章大統領章)으로 건국공로훈장단장(建國功勞勳章單章)을 건국훈장국민장(建國勳章國民章)을 칭하게 되었으며 그 아래로 건국훈장애국장(建國勳章愛國章), 건국훈장애족장(建國勳章愛族章)이 있다. 그 뒤 「상훈법」은 1971년, 1973년, 1990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일반포상은 ‘가. 포상대상: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사망자를 포함함<sup>4)</sup>. ‘라. 훈격결정: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훈, 수

4)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16, 14쪽.



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포상분야 종류·대상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sup>5)</sup>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추진절차의 내부 내용을 살펴보면 포상절차에서 훈격의 적정 운영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수여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 표창 중심으로 운영함. 훈격별 포상규모는 하위 훈격 보다 상위 훈격의 인원을 적게 함으로서 훈격의 영예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함.<sup>6)</sup>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포상규모 협의사항에서는 1등급 훈장 대상자 추천과 공적심사기준 사전협의 사항에 대해서 명시해 놓았다.<sup>7)</sup>

#### <1등급 훈장 대상자 추천>

- 1) 1등급 훈장은 국가서훈의 영예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함.
- 2) 1등급 훈장은 그 영예성 확보를 위하여, 일생을 통한 활동으로 국가 사회 발전과 당해분야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고, 국민적 추앙을 받는 전국적 인사(원로급)를 추천하여야 함.

#### <공적심사기준 사전협의>

- 1) 추천기관은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공적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포상규모 협의 시 제출하여야 함.
- 2) 포상규모 결정시 해당 분야의 성과 및 포상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고, 대상 분야 종사자 수, 포상의 파급효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2) 건국훈장 등급의 분류

건국훈장은 상훈법에 의해 5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

5)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위의 책, 2016, 16쪽.  
 6)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위의 책, 2016, 44쪽.  
 7)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위의 책, 2016, 53쪽.

서는 자세하게 명시되고 있지 않다. 포상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공훈의 내용에 따라 그 등급이 결정되는데 법적으로 확실히 되어있지 않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독립활동이 시기별, 계열별, 내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한가지로 통일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포상 시기에 따라 독립운동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요인도 작용한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건국훈장의 등급에 따른 포상자의 공적서를 분석하여 내용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sup>8)</sup>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포상 받은 독립유공자는 30명으로 이승만, 이시영을 비롯하여 김구, 서재필, 안중근, 안창호, 한용훈, 최익현, 이준 등 누구나 그 업적을 알만한 인물들이다. 또한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 순국한 인물이 대부분이며 해방공간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바지한 공이 큰 유공자들이 대한민국장에 서훈되었다. 다양한 운동계열 중 임시정부 활동 계열의 인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독립운동계열에서도 그 계열에서 비교적 지도자격의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다. 1962년에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포상되었으며 이후로 드물게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되어졌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포상 받은 독립유공자는 93명으로 나석주, 유인석, 이동녕, 이상설, 신채호, 주시경 등 비교적 독립유공자로 잘 알려진 인물들이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한국전쟁 이전에 순국하였으며 임시정부 이외에도 친일 인사 처단과 폭탄 투척 등의 의열활동을 전개했던 인사들과 다양한 문화계몽 활동을 펼쳤던 인물들이 서훈되었다. 대통령장 또한 62년에 가장 많은 포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례적으로 2005년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인 여운형에게 대통령장이 포상되었다.

건국훈장 독립장을 포상 받은 독립유공자는 823명으로 유관순, 안경

8) 본 분석 내용은 건국훈장 등급에 따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에 따른 포상자군을 선택 분석하는 것임으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주지하는 바이다.

신, 나철, 박재혁, 안희제, 황현 등이 서훈되었다. 독립장은 건국훈장 5등급 중 비교적 높은 등급으로 62년 이후 지속적으로 포상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그 공훈이 인정되면 독립장에 서훈되었다.

건국훈장 애국장과 애족장은 각각 4,228명, 5,473명이 서훈되었으며 건국훈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드물게는 80년대 이전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에 서훈되었다가 그 공로가 인정되어 훈격이 올라간 경우도 있다. 3.1운동과 국내항일 계열의 독립유공자들이 추서되었고 90년대 이후 애국장과 애족장에 대한 포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국훈장 이외에도 그 공로에 따라 건국포장(1,176명), 대통령 표창(2,739명)을 포상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포상 비중이 늘어난다.

모든 건국훈장을 비롯한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은 기본적으로 독립활동의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1년 이상 활동을 지속했고 구금6개월 이상을 받은 자에 한해서 포상되고 있다.

### Ⅲ. 부산지역 독립운동가 현황

2016년 9월 현재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록된 부산지역 독립운동가는 2016년 9월 현재 115명이며 독립운동계열별로는 3.1운동 관련 58명, 임정활동 관련 4명, 국내항일활동 26명, 해외 독립운동 14명, 광복군활동 4명, 의열활동 3명, 기타 6명이다.<sup>9)</sup>

9) 국가보훈처에서는 운동계열을 3.1운동, 국내항일, 의병활동, 만주노령, 임시정부, 일본미주, 기타로 분류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부산지역의 특징에 따라 3.1운동, 임시정부, 국내항일, 해외독립활동, 광복군활동, 의열활동, 애국계몽·사회주의 활동으로 나누었다.

## 1. 1919년 3.1운동 이후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서 나타나듯이 3.1운동 계열의 독립유공자 포상 비중이 가장 높는데 그 이유는 3.1운동에 전민족적인 참여가 있었기도 하지만, 재판기록과 같은 일제의 식민통치자료들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0)</sup> 부산도 마찬가지로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공훈이 58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산이 동래장터만세운동, 구포장터만세운동, 범어사의 3.1운동, 기장지역의 3.1만세 운동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계층을 망라하여 폭발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3.1운동과 관련하여 공훈된 독립유공자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대부분 건국훈장 중 가장 아래 등급인 애족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으며 대부분 독립유공자 포상이 활발했던 90년대에 공훈되었다.

<표 1> 3.1 운동 관련 독립만세시위

연번	이름	훈격	지역	연번	이름	훈격	지역
1	권철암 (權鐵巖)	애족장(90)	부산 동래	30	김달수 (金達洙)	애족장(95)	부산 동래
2	김귀룡 (金貴龍)	애족장(90)	부산 동래	31	박두천 (朴斗天)	애족장(95)	부산
3	김영규 (金永奎)	애족장(90)	부산 동래	32	엄병영 (嚴秉永)	대통령표창(95)	부산 동래
4	김영서 (金永瑞)	애족장(90)	부산	33	윤장수 (尹章守)	대통령표창(95)	부산 동래
5	김윤희 (金允熙)	애족장(90)	부산 동래	34	이상덕 (李相德)	애족장(95)	부산 동래
6	김인호 (金仁浩)	애족장(90)	부산 동래	35	신주성 (愼注星)	대통령표창(96)	부산

10) 윤선자, 앞의 논문, 2010, 373쪽

연번	이름	훈격	지역	연번	이름	훈격	지역
7	김한기 (金漢琦)	애족장(90)	부산 동래	36	허영조 (許永祚)	대통령표창(96)	부산
8	박영준 (朴英俊)	애족장(90)	부산 동래	37	양수근 (梁壽根)	대통령표창(97)	부산 동래
9	엄진영 (嚴進永)	애족장(90)	부산 동래	38	양태용 (梁太鎔)	대통령표창(97)	부산 동래
10	이갑이 (李甲伊)	애족장(90)	부산	39	윤경봉 (尹敬奉)	건국포장(97)	부산 동래
11	임봉래 (林鳳來)	애족장(90)	부산	40	김용구 (金龍九)	대통령표창(98)	부산 동래
12	정호종 (鄭浩宗)	애족장(90)	부산 동래	41	윤삼동 (尹三東)	대통령표창(99)	부산 동래
13	최기복 (崔基福)	애족장(90)	부산 동래	42	이수열 (李守烈)	대통령표창(2000)	부산 동래
14	추규영 (秋圭映)	애족장(90)	부산 동래	43	김성조 (金聖祚)	애족장(2003)	부산 동래
15	허치옥 (許致玉)	애족장(90)	부산 동래	44	박영환 (朴永煥)	대통령표창(2005)	부산 동래
16	최창용 (崔昌鎔)	애족장(90)	부산 동래	45	윤상은 (尹相殷)	대통령표창(2005)	부산 동래
17	윤정은 (尹正殷)	애국장(91)	부산	46	허희중 (許希中)	대통령표창(2006)	부산 동래
18	구수암 (具壽巖)	애국장(92)	부산 동래	47	박성해 (朴性海)	대통령표창(2008)	부산
19	김기삼 (金琪三)	대통령표창(92)	부산 동래	48	최익수 (崔益守)	대통령표창(2008)	부산
20	김도엽 (金度燁)	애국장(92)	부산 동래	49	신종은 (申鍾殷)	대통령표창(2009)	부산 동래
21	김봉추 (金鳳樞)	대통령표창(92)	부산	50	강석이 (姜碩伊)	애족장(2014)	부산 동래
22	김애련 (金愛蓮)	대통령표창(92)	부산	51	김덕원 (金德元)	대통령표창(2014)	부산 동래
23	박정국 (朴植國)	대통령표창(92)	부산	52	노원필 (盧源弼)	대통령표창(2014)	부산 동래

연번	이름	훈격	지역	연번	이름	훈격	지역
24	심순의 (沈順義)	대통령표창(92)	부산	53	안화중 (安華重)	대통령표창(2014)	부산 동래
25	오기원 (吳基元)	건국포장(92)	부산 동래	54	이몽석 (李夢石)	대통령표창(2014)	부산
26	임명조 (林命祚)	대통령표창(92)	부산 동래	55	김순이 (金順伊)	애국장(2014)	부산
27	김반수 (金班守)	대통령표창(92)	부산 동래	56	김난줄 (金蘭茁)	대통령표창(2015)	부산
28	신두성 (辛斗星)	대통령표창(93)	부산 동래	57	박정수 (朴貞守)	대통령표창(2015)	부산
29	정성언 (鄭聖彦)	대통령표창(93)	부산 동래	58	박연이 (朴連伊)	대통령표창(2015)	부산

## 2. 임시정부 활동

거국적인 민족저항운동인 3.1운동 발발 이후 애국지사들은 일본의 침탈에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느끼고 상해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민족지도자들이 모여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유공자포상 현황에서 임시정부 활동 인사의 포상 비율이 8.24%로 적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출신 임정활동 독립유공자 포상도 4명에 그친다. 김갑, 장건상의 경우 임시정부의 각료로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정인찬, 서영해의 경우에는 임시정부의 하위기관에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가 3.1운동의 효과로 수립된 만큼 임시정부활동 독립유공자들 또한 3.1운동으로 일경을 피해 상해로 망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시정부의 활동이 독립운동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예우도 비교적 높은 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lt;표 2&gt; 임시정부 활동

연번	이름	훈격	지역	연번	이름	훈격	지역
1	김갑 (金甲)	독립장(86)	부산 동래	3	정인찬 (鄭寅贊)	애족장(90)	부산 동래
2	장건상 (張建相)	대통령장(86)	부산	4	서영해 (徐嶺海)	애국장(95)	부산

### 3. 부산을 거점으로 국내항일운동 전개

국내항일 활동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이 20.85%로 3.1운동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독립활동에 대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그 비중이 큼을 짐작하게 한다. 부산지역도 마찬가지로 국내항일운동에 대한 포상이 26명으로 3.1운동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일제강점기 말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순국단(殉國團), 흑조회(黑潮會), 무궁단(無窮團) 등의 독립활동이 대부분이며 범어사(梵魚寺)의 독립활동과 해외독립운동과 연계한 군자금 모금 및 선전활동이 있다. 포상시기 또한 대거 포상활동이 이루어졌던 90년대가 많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발굴 포상되고 있으며 훈장은 낮은 등급과 대통령포장이 주를 이룬다.

&lt;표 3&gt; 국내항일 활동

연번	이름	훈격	지역	연번	이름	훈격	지역
1	김영찬 (金永瓚)	애족장(90)	부산 동래	14	차병곤 (車炳坤)	애국장(95)	부산 동래
2	문인갑 (文仁甲)	애족장(90)	부산 동래	15	양정옥 (梁正彧)	애족장(95)	부산
3	박영출 (朴英出)	애족장(90)	부산 동래	16	김규직 (金圭直)	애국장(96)	부산
4	이강희 (李康熙)	애족장(90)	부산	17	김진옥 (金鎭沃)	건국포장(96)	부산

연번	이름	훈격	지역	연번	이름	훈격	지역
5	이관수 (李觀洙)	애족장(90)	부산 동래	18	오규환 (吳珪煥)	대통령표창(98)	부산 동래
6	최상림 (崔尙林)	애국장(91)	부산 동래	19	이광우 (李光雨)	애족장(2000)	부산
7	박세현 (朴世鉉)	애족장(93)	부산 동래	20	어소운 (魚小雲)	대통령표창(2002)	부산 동래
8	박정오 (朴楨五)	건국포장(93)	부산	21	박성봉 (朴成鳳)	대통령표창(2003)	부산 동래
9	신정호 (辛正浩)	건국포장(93)	부산	22	한덕술 (韓德述)	대통령표창(2005)	부산
10	전창호 (田昌浩)	건국포장(93)	부산	23	김영호 (金永浩)	건국포장(2009)	부산
11	김법린 (金法麟)	독립장(95)	부산 동래	24	강무홍 (姜武洪)	대통령표창(2009)	부산 동래
12	김한경 (金漢經)	애족장(95)	부산	25	최진학 (崔進鶴)	애족장(2014)	부산
13	정오연 (鄭五然)	애국장(95)	부산	26	최복순 (崔福順)	대통령표창(2014)	부산

#### 4. 만주, 일본,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전개

해외 독립운동가들에 공훈은 만주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 의해 대부분의 독립지사들이 만주로 망명하여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독립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부의 독립운동가들은 미주로 이주하여 외교를 통한 독립활동을 하였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만주로 망명해 독립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대부분 의열단과 관련한 활동과 무장투쟁을 주도하였다. 이는 약산 김원봉의 독립운동의 영향을 받았음을 박차정을 비롯한 건국훈장 포상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조서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에는 유학생들과 일본지역 공



장 취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단체의 활동이며 미주의 경우 2016년 건국포장을 받을 유진석의 활동으로 하와이에서 임정의 활동을 돕고, 외교를 통한 독립활동을 하였고 국내 및 만주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 등을 전개한 공적을 인정받아 포상되었다.

<표 4> 만주, 일본, 미주 지역 독립운동

연번	이름	훈격	지역	연번	이름	훈격	지역
1	이봉우 (李鳳雨)	독립장(80)	부산 동래	8	박진태 (朴鎭台)	애국장(91)	부산 동래
2	한흥교 (韓興敎)	애국장(90)	부산 동래	9	김규원 (金圭元)	건국포장(93)	부산 동래
3	김병태 (金餅泰)	독립장(95)	부산	10	김태엽 (金泰燁)	애족장(2009)	부산
4	문시환 (文時煥)	애족장(95)	부산 동래	11	전병희 (全炳熙)	애족장(2011)	부산
5	박차정 (朴次貞)	독립장(95)	부산 동래	12	박세용 (朴世用)	애족장(2006)	부산 동래
6	서영석 (徐泳奭)	애족장(90)	부산	13	이동화 (李東華)	애국장(2009)	부산 동래
7	한하연 (韓何然)	애족장(90)	부산	14	유진석 (兪鎭奭)	건국포장(2016)	부산

## 5. 한국광복군 활동

광복군 활동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공훈전자사료관에는 운동계열 중 하나로 분류가 되어있다. 송윤화는 한국광복군에 입대하여 활동하였고 최장학과 한형석은 중국으로 망명해 중국군에 입대하였다가 한국광복군에 편제되어 독립활동을 하였다. 김재은의 경우에는 일본군에 징병, 중국전선에 배속된 후 탈출하여 한국광복군에 입대하였다.

<표 5> 광복군 활동

연번	이름	훈격	지역	연번	이름	훈격	지역
1	송윤화 (宋潤和)	애족장(90)	부산	3	한형석 (韓亨錫)	애국장(90)	부산 동래
2	최장학 (崔章學)	애국장(90)	부산 동래	4	김재은 (金在殷)	애족장(2002)	부산

## 6. 의열 활동

의열 활동의 경우 조국해방을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쟁과 친일 변절자와 일본의 고위관료 암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또한 대표적인 의열활동이었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의 박재혁이 공훈되었고 이를 도왔던 오재영, 김영주가 추가로 포상되었다.

<표 5> 광복군 활동

연번	이름	훈격	지역	연번	이름	훈격	지역
1	박재혁 (朴載赫)	독립장(62)	부산	3	김영주 (金永柱)	대통령포장(96)	부산
2	오재영 (吳哉泳)	애족장(90)	부산	-	-	-	-

## 7. 애국계몽, 사회주의 계열

부산지역의 여성독립운동가는 공훈독립유공자 115명 중 11명이 있다. 부산출신 여성독립운동가 중 안정석과 김순이를 제외한 9명이 일신 여학교 출신이다. 안정석의 경우 본적은 부산이나 평양에서 출생하여 애국부인회 활동 등을 전개한 특이한 경우로 부산지역 독립운동가로 검색이 되고 있다. 김순이의 경우 또한 본적은 부산이지만 활동 지역은 경남 통영이며 부산지역 독립운동가로 검색된다.

본 고에서는 여성독립운동가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독립활동 중 여성운동 및 계몽활동,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한데 묶어 분류하였다. 백광흠, 백신영, 안정석, 김인주는 대동청년단, 애국부인회 등의 활동을 통해 민중계몽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국가보훈처와 공훈전자사료관에는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분류는 없으나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서를 살펴보면 다양한 운동계열에서 사회주의계열의 독립활동 공적이 나타나 있다. 최천택과 김환성은 부산지역에서 노동운동, 물산장려 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므로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로 분류하였다.

<표 5> 광복군 활동

연번	이름	훈격	지역	연번	이름	훈격	지역
1	백광흠 (白光欽)	애족장(90)	부산 동래	4	김인주 (金仁柱)	애국장(91)	부산
2	백신영 (白信永)	애족장(90)	부산	5	최천택 (崔天澤)	애족장(2003)	부산
3	안정석 (安貞錫)	애족장(90)	부산	6	김환성 (金煥性)	건국포장(2008)	부산

#### IV. 부산지역 독립운동가 포상년도별 현황 분석

독립유공자 포상은 1949년에 제정되어 이승만이 건국훈장대한민국장을 받은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부산은 1962년 박재혁의사에 대한 건국훈장국민장 추서가 최초이다. 이후 1980년대에 이봉우(李鳳雨)와 장건상(張建相), 김갑(金甲)이 각각 독립장, 대통령장, 독립장을 받았다. 건국훈장에 대한 포상이 1990년대에 대거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로 부산도 대부분의 독립유공자 포상이 9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2009년 이전까지 꾸준히 독립운동가 포상이 이루어졌다. 2010년 이후에는 그동안 포상되지 못한 독립운동가와 해외에서 독립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본 고에서는 편의상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재임기를 기준으로 포상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1948년 남한단독 선거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4월 27일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 공포하였다. 이후 건국훈장은 1949년 건국 일주년 기념식 행사 후 재임 중이던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에게 건국공로 일등훈장(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것이 최초이다.<sup>11)</sup> 이후 1950년 호머 헐버트가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 받았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기도 전인 1953년 중국이 장개석이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제 1공화국에서는 총 3명이 건국훈장을 받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립된 한반도는 또다시 남북을 나누어 미군정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1948년 남한단독 선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국가체제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친일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의 좌절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정부 수립 후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민족해방을 위해 몸 바친 선열들을 서훈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음을 알

11) 『동아일보』 1949.8.16. 2면, ‘建國功勞者表彰’.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패로 인해 실각한 이승만정권과의 차별화와 4.19 혁명 정신을 근간으로 5.16군사쿠데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정부의 태생적 문제로 인한 정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자하였는데<sup>12)</sup> 이로 인해 1962년 208명, 1963년 261명의 독립유공자들이 공훈을 받게 되었다. 또한 1963년 12월 14일 기존의 상훈관계법령들을 통합하여 「상훈법」을 제정<sup>13)</sup>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이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권 한 것에 비해 683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독립유공자포상이 이루어졌던 것<sup>14)</sup>은 경제개발과 국가안보체제 확립이 우선시 되어 관심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산지역의 독립유공자 공훈도 1962년 독립장을 수여받은 박재혁이 유일하다. 박재혁의 경우에는 1920년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후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았으며 형 집행 전 순국하였다는 명확한 공적 내용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2.12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 역시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3.1운동을 연계한 다양한 독립유공자 포상과 독립기념관 건립, 항일유적 복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sup>15)</sup> 또한 1961년 설립된 군사원호청을 85년 국가보훈처로 개

12) 이강수,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보훈정책 결정요인 연구-1961년 이후 역대정부의 보훈정책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82쪽.

13) 『경향신문』 1963.12.6. 2면, ‘賞勳法 등 通過’.

상훈법 = 현행상훈관계법령은 정부수립 이래 자주 각령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왔으나 각훈장령 사이에 조문이 중복되고 제식균형이 맞지 않아 불합리하며 불비한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고 신헌법 78조에 따라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14) 박정희 정권이 포상 현황은 1962년 204명, 1963년 261명, 1966년 3명, 1968년 106명, 1969년 1명 1970년 2명, 1976년 1명, 1977년 105명이다.

15) 이강수, 앞의 논문, 2015, 92쪽.

칭하여 국가유공자 보훈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진 것은 67명뿐이다. 이는 정권의 정통성을 3.1운동 등의 항일독립활동과 연관지으려 했으나 집권 기간 진행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과 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인한 외교 마찰 등을 미루어 볼 때 당연할 결과이다. 제 5공화국 시기 부산지역의 건국훈장 수여도 80년 이봉우(독립장)<sup>16)</sup> 86년 장건상(대통령장)과 김갑(독립장)이 전부이다. 장건상과 김갑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임시정부를 통한 독립활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 2. 노태우, 김영삼 정권

1988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군부라는 굴레 속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요인은 새로운 정책 보다는 안정중심의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노태우 정권은 정부의 정통성을 독립운동에 기초하기 위해 ‘독립운동 공훈록’을 제작 발간하는 등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였다.<sup>17)</sup> 또한 독립기념관과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설립 된 이후 독립운동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진행되었고 국민적인 관심도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로 독립유공자 서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1990년에는 3,629명, 91년 1,119명, 92년 595명이 서훈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초의 ‘문민정부’라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민족정기선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독립운동

16) 이봉우는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임정과의 연락을 위해 상해로 가던 중 일경에 피살되었다.

17) 이강수, 앞의 논문, 2015, 122쪽.

가와 그 유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보훈혜택을 건국훈장 및 건국장 수상자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확대하였으며 대상범위도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손자녀, 손자부로 확대하였다. ‘독립운동사 재조명’ 사업과 국내 외 독립 사적지 방문 행사 등을 진행<sup>18)</sup>하여 민족정기에 이바지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렸다. 이 시기도 많은 독립운동가가 서훈되었는데 특히 1995년은 1,442명이 공훈을 받았다. 이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부 주도로 서훈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과 마찬가지로 부산지역 독립운동가들도 이 시기 가장 많이 서훈되었다.<sup>19)</sup> 훈격의 경우에도 애국장, 애족장을 수여받는 경우가 많았고 운동계열도 3.1운동과 같은 거국적인 항일독립운동, 국내항일운동과 학생들의 항일운동에 대한 서훈도 이루어졌다. 드물게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로 뚜렷한 활동을 했던 박차정이 독립장에 서훈되었는데 포상년도가 95년인 것으로 보아 정부의 광복 50주년 기념 정책과 연관되어 보인다.

### 3. 김대중, 노무현 정권

97년 말부터 시작된 IMF는 정부의 독립유공자 서훈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97년 이후 서훈이 크게 줄어 200명 이하를 기록하였다.<sup>20)</sup>

18) 이강수, 위의 논문, 2015, 107쪽.

19) 구수암, 권철암, 김귀룡, 김규원, 김규직, 김도엽, 김반수, 김법린, 김영찬, 김윤희, 김인호, 문시환, 문인갑, 박영준, 박진태, 신두성, 오기원, 윤장수, 윤정은, 이관수, 임명조, 정성언, 정호종, 최기복, 최상립, 최창용, 추규영, 허치욱, 김기삼, 김달수, 김병태, 김봉추, 김애련, 김영규, 김영서, 김영주, 김인주, 김진욱, 김한경, 김한기, 박두천, 박세현, 박영출, 박정국, 박정오, 박차정, 백광훈, 백신영, 서영석, 서영해, 송윤화, 신정호, 심순의, 안정석, 양수근, 양정욱, 양태용, 엄병영, 엄진영, 오재영, 윤경봉, 이갑이, 이강희, 이상덕, 임봉래, 전창호, 정오연, 정인찬, 차병곤, 최장학, 한하연, 한형석, 한홍교, 허용조 (74명)

20) 98년 158명, 99년 144명, 2000년 177명, 2001년 111명, 2002년 208명(2002년 숫자가 증가한 것은 한일월드컵 개최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참여정부로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새로운 가치를 보훈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친일민족반역자 진상조사와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을 국가유공자로 편입시키는 정책이었다. 그 동안 독립운동을 하였음에도 서훈되지 못한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 111명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을 부여했다.<sup>21)</sup> ‘독립유공자 포상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묻힌 독립유공자를 새롭게 발굴, 포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과 민족정기계승 사업 등 활발한 독립유공자 공훈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권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독립유공자들 또한 1998~2002년 사이 4명(김용구, 오규환, 이수열, 윤삼동)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 그쳤다. 참여정부 당시 서훈 받은 인물로는 김성조, 박성봉, 박세용, 박영환, 윤상은, 한덕술, 허희중, 김환성, 박성해, 최익수, 최천택(11명)이 있는데 이중 보안법으로 피체되어 옥고를 치른 인물이 4명이며 직접적인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했던 인물이 3명<sup>22)</sup>(박세용은 보안법으로 피체되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공산당에 가입하였다)이다.

#### 4. 이명박 정권 이후

이명박 정권은 광복 6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광복군 창설 90주년 등의 다양한 기념행사가 이루어진 정권으로 이러한 기념식들을 통해 관련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이루어 ‘보훈 외교’라는 독특한 시책을 만들어냈다. 또한 국민의 안보 교육을 목적으로 ‘나라사랑 과’를 만들어 보훈단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sup>23)</sup>하고자 했으며 독

21) 이강수, 앞의 논문, 2015, 94쪽.

22) 보안법 피체 : 박성봉, 박성해, 최익수, 박세용 / 사회주의계열 추정 : 박세용, 김환성, 최천택



립유공자 공훈 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200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3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가 서훈되어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다. 부산도 2009-2016까지 15명의 독립유공자가 추가로 서훈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통해 묻혀있던 인물들이 서훈되었고 국외에서 독립활동을 전개하여 그 공적을 알 수 없었던 인물(유진석)이 추가로 공훈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부산에서도 김난줄, 김순이, 최복순의 공적이 확인되어 추가로 서훈되었다.

## V. 결론

조선은 1876년 일본에 의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강제적으로 맺게 되면서 나라의 문을 열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배에 들어서게 된다. 일제의 무단통치와 문화통치 등 악랄 식민지배 하에서 우리 민족은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노력과는 별개로 1945년 열강에 의해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후 3년간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을 받았으며 1948년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최근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우리 주변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4,562명의 독립유공자들이 그 공훈을 인정받아 훈장이 수여되었다.

---

23) 이강수, 앞의 논문, 2015, 120쪽.

본 논고는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현재 독립활동이 인정되어 서훈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건국공로훈장령」이 제정, 공포되었고 독립 1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이 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대한민국 초기에는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국가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기였다. 또한 미군정에서 친일파를 그대로 등용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대로 이어가면서 친일파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62년 대대적인 포상이 이루어졌고 1963년 기존의 훈장령들을 통합하여 상훈법을 제정하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이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이며 1990년과, 1991년, 1995년 천명 이상의 독립유공자들이 서훈되었다.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에 30명이 수여되었고 등급이 내려갈수록 더 많은 숫자의 독립유공자들이 훈장을 받았으며 건국훈장 이외에도 건국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 운동계열별로는 전 민족적인 의거였던 3.1운동에 가담한 독립유공자들의 포상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국내항일, 의병활동, 국외항일, 임시정부 등의 활동으로 서훈되었다. 지역별로는 일제강점기 침략의 교두보가 되었던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지역의 독립유공자들의 포상이 가장 많았다. 출신지역을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들의 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건국훈장에는 1등급 대한민국장과 그 아래로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이 있으며 공로에 따라 건국포장과 대통령 표창이 수여된다. 각종 훈장과 공훈심사에 대한 규정은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각 등급에 대한 정확한 심사 기준과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위원들의 심사 기

준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된다. 이는 독립활동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제 35년을 비롯한 조선후기 수많은 우리 민족들이 다양한 방법과 가치관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악랄했던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한 경우도 많았으며 친일에 대한 가치관과 독립에 대한 가치관도 시기와 인물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록된 14,562명 중 출신지역이 부산임이 밝혀진 115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전자공훈자료관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내의 독립유공자 찾기를 통해 부산지역 출신의 독립유공자를 확인했다. 그러나 부산의 전통적인 지역적 범위였던 ‘동래’라는 명칭과 일제강점기 이후 행정구역명이 된 ‘부산’을 통합되지 않아 부산과 경상도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 부산도 전국의 독립유공자 현황과 마찬가지로 3.1운동과 관련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범어사를 기점으로 하여 동래장터 만세운동, 구포장터 만세운동 등 다양한 3.1만세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국내항일활동으로 서훈된 독립유공자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학생들의 항일운동이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출신의 독립유공자 115명의 포상년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역대정권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건국초기에는 법령을 제정하여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공훈을 인정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그 효과는 미비하여 4명만이 훈장을 수여받았기에 부산지역의 독립유공자는 서훈받지 못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부산지역은 박재혁 1명만이 독립장에 서훈되었을 뿐이다. 이는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이 일제강점기 내에서도 큰 충격이었으며 그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 재

입기 ‘군사원호청’을 ‘국가보훈처’로 개칭하여 다양한 보훈사업을 실시하는 듯 했으나 실제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부산에서도 3명이 서훈 되는데 그쳤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에 독립기념관과 독립운동사연구소가 활발히 활동하여 ‘독립유공자 공훈록’이 제작되고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서훈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산지역에서도 많은 숫자의 독립유공자들이 공적이 인정되어 서훈되었다. ‘문민정부’로 출발한 김영삼 정권도 ‘민족정기 선양’이라는 기치아래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였다.

특히 주춤했던 건국훈장 포상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 부산도 74명의 독립유공자가 서훈되었지만 대부분이 애국장 아래 등급이었으며 이는 90년대에 들어서면 독립유공자 심사가 강화되고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례적인 것은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이자 여성독립운동가인 박차정이 95년도에 독립장에 서훈된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독립유공자 포상 횟수가 줄었으며 부산역시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로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확립하면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또한 관심 받지 못했던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이 증가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는 국가적인 독립관련 행사들이 많았던 시기로 이를 활용한 ‘보훈 외교’를 실시하였고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서훈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발굴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연구와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훈되었다.

본 논고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부산지역의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운동계열별 공훈시기별로 분석하였다. 현재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중 3,253명이 경상도 출신이며 그 중 부산의 독립유공자는 115명이다. 하지만 부산이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양된 독립유공자가 적은 것은 많은 문제점을 시사해준다. 크게는 독립운동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친일과 항일의 경계가 모호하고 친일이 항일로 둔갑했던 과거의 문제에 역사교육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운동가를 분류할 때 현대의 지리적 관점에서 부산이라는 규명을 하지 않고 경상도와 묶거나 부산을 부산, 동래로 구분지어 놓은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부산은 한반도에 국가가 건립된 이래 일본과 가장 많은 마찰을 겪은 지역이며 이로 인한 부산지역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래 부산지역민들은 일본으로부터 가장 악랄한 지배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항일민족의식을 표출하였다. 현재 부산은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과 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재혁, 박차정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며, 범어사와 관련된 독립활동과 부산항일학생의거 등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알려진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부산에서 독립활동을 펼쳤던 인물 등의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를 통해 부산이 ‘항일 독립운동의 고장’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저서

- 국가보훈처, 『(언론의 창에 비친) 보훈문화』, 2001.  
 국가보훈처, 『(광복 60주년) 국민과 함께한 국가보훈』, 2005.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16.  
 강대민,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전통과 계승」, 『(자료로 본)부산 광복 60주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6.

2. 논저

강대민,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 개관」 『문화전통논집』 14,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윤선자, 「광복 후 애국선열 선양정책 재조명」 『사학연구』 100, 한국사학회, 2010.

이종정, 「보훈심사의 정책변동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주환, 「건국절 제정의 보훈정책적 함의: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3-4, 한국보훈학회, 2014.

이강수,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보훈정책 결정요인 연구-1961년 이후 역대정부의 보훈정책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 기타

『동아일보』 1948. 12. 24. 2면, ‘建國功勞章令制定’.

『동아일보』 1949.8.16. 2면, ‘建國功勞者表彰’.

『동아일보』 1957. 5. 31, 3면 ‘一等建國功勞勳章’.

『경향신문』 1963.12.6. 2면, ‘賞勳法 등 通過’.

『경향신문』 1977. 11. 20, 1면, ‘政府수립후 최대규모 獨立有功1,330명 추가褒賞’.

『동아일보』 1995. 3. 1, 7면, ‘3.1운동 76돌 생존한 獨立유공자 448명’.

국가보훈처 ([www.mpva.go.kr](http://www.mpva.go.kr))

공훈전자자료관 ([e-gonghun.mpva.go.kr](http://e-gonghun.mpv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투고일: 2016.09.30. 심사완료일: 2016.11.23. 게재 확정일: 2016.12.07.

| Abstract |

Analysis of independence patriots' List of merits in Busan

Kim, Hye - Jin

Reward for men of merit for independence movement is currently presenting in various categories 5 levels of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s; Republic of Korea Medal, Presidential Medal, National Medal, Patriotism Medal, National Pride Medal, and National Foundation Medal, Presidential Cit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number of patriots who have been awarded by September 2016 was 14,562 people including 30 people were conferred Republic of Korea Medal. As the level of award goes down, the number of conferment increases.

These conferment of independence patriots are proceeding well since the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in 1949 and Awards and Decorations Act in 1963 was established. There has been an explosive increase of award for the independence patriots after 1990 to each timing this is because A Military Hocheong, which was founded in 1950, was renamed Veterans Affairs in 1987 and work of merit and prize has been actively conducted.

Also, since Independence Hall was built and there was History of Immigration Institute, the researches of independence and the Korea veterans were being carried out and peoples' interest raised in the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

Men of national merit are classified into several categories by March 1st Movement, resistance to Japan, provisional government activities, civilian

army activity. A largest proportion of them are Korean Independence Fighters of March 1st Movement. By region, Gyeongsang province has independence patriots most who were conferred due to its regional peculiarity. Also there is the big part to patriot who can not know their hometown. This shows that more research about an individual should be conducted. This study is to analyze conferment for 115 independence patriots by series of movements and period of conferment based on historical data. Reward for men of merit for March 1st Movement in Busan was the highest, just like the number of patriots throughout the country and in the 1990s, it is significantly increased.

In analyzing historical data about independence patriots, it has various problems.

To solve them, we need not only more conferment and reward, but also comprehensive researches about independence patriot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Key word:** independence patriots, List of merits, Analysis, Busan,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s